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혁명의 현실성과
마르크스주의**

▶ 8 ~ 9 면

진보대통합 논쟁
**참여당과의
통합은 안된다**

▶ 4, 5, 10 면

노르웨이 테러
**비극은 어떻게
잉태됐는가**

▶ 6, 7 면

이집트 혁명
**노동자의 힘으로
전진하는 혁명**

▶ 12·16 면

학생운동
**상반기 투쟁
평가와 전망**

▶ 11 면

발행인_김민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 (주)아미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호)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8 2

Left21.com

제62호 | 2011년 8월 6일 ~ 8월 19일 | 값 1,800원

리프트21

노르웨이 살인마 브레이비크
“이명박을 만나고 싶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민주주의 공격
물가 폭등 조장
살인해고 지원과 노동자 탄압

한국 노동자들
“이명박 꿀보기 싫다”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알아야?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끄럽다”

이명박, 아니 다행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라”

물가 폭등에 대한
이명박의 대책

“참보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되 때를 쓰는 풍토를 없애는 데 정책방향의 본질이 있습니다.”

홍준표의 서민 모독

“치산치수는 공동체 유지의 근본인데, 최근엔 치산치수를 ‘잡질’이라며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매년 수해 방지에 실패한
김문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한심한 기업인 ...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업인”

〈조선일보〉에게조차 씹히는
조남호

“1백 년 만의 폭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명박과 오세훈의 거짓말을
바로 잡는 기상청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모두 전태일 분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이병철이나 정주영을 소개한 교과서는 1종에 지나지 않는다”

감히 전태일과 이병철을
비교하는 전경련

“희망버스 참가자, 그대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권심판입니까. 체제 전복입니까. 사회주의 혁명입니까.”

여비이연합을 밤새 격려한
김형오

“기독교 문명을 지켜야한다는 브레이비크의 생각에 동의한다”, “폭력 부분을 빼면 일부는 훌륭하다”

브레이비크를 옹호하는
이탈리아 우익 정치인들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여섯 명은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1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7월 28일 재판부는 우리에게 사실상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하거나 “옥외 집회가 끝난 직후에” 도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한 명은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우리를 기소했지만, 사실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우리 여섯 명이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지난해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정부는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를 기소하고 벌금 8백만 원이라는 악식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실제 우리를 연행한 경찰 이종순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검사도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검찰의 황당



7월 28일 열린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명박의 공안 탄압 속에서 단호한 투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

한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싸웠고, 법정 밖에서도 우리 사건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모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우리는 검찰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검찰 논리의 모순을 공격했다.

거짓과 모순

검찰 측 증인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증인은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옹호했다.

우리의 지지와 연대 호소에 정말 많은 사

람들이 호응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노조 등 각종 진보적 단체의 인사들 2백여 명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독일 국회의원 크리스틴 부흐홀츠 등 50여 해외 진보적 인사와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도 함께해 우리를 지지해 줬다. 또 집회와 거리에서도 노동자와 학생들이 큰 지지를 보냈고, 곳곳에서 보내준 투쟁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 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1이 7월 21~2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주의, 진보대통합과 2012년 선거,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70여 개 주제로 토론이 열린 강의실은 나흘 내내 노동자·학생들의 활력과 호기심, 열정으로 가득 찼다. 등록한 참가자만 1천2백 명이 넘었다.

이번 맑시즘 2011에 연사로 참가한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개막식 연설에서 아랍 혁명을 예로 들며 “이제 혁명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맑시즘 나흘 동안 우리 모두 혁명가로 거듭나자”고 제안했다. 한진중공업에서 살인해고에 맞서 2백 일 가까이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동지도 전화 연결을 통해 개막 연설을 해서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다.

나흘 동안 혁명의 현실성, 노동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변혁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변혁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카이스트에 다니는 한 학생은 맑시즘 참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맑시즘에서 듣는 강연과 토론은 냉철하고 논리적이라 듣는 사람이 속이 시원합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잘 몰랐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랍 혁명과 유럽의 반긴축 투쟁, 노동자 학생 투쟁 등에 관해 “우리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낀다” 하고 말했다.

아랍 혁명과 유럽의 반긴축 투쟁, 제국주의 이론 등에 대해 발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와의 토론 시간에는 매번 수백 명의 청중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에도 많은 노동자·학생들이 참가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아랍 혁명에 대한

토론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부활을 뜻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이 부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전한 마르크스주의 즉, 혁명의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혁명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혁명의 시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승리하려면 정말로 정치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혁명은 조직되지 않은 부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자본가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힘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심원한 위기에 빠지고 혁명이 부활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단지 지켜볼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화된 투쟁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김수형 교수의 자본론 강의에 2백여 명이 참가하는 등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에 대해 토론한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강연에 참가한 사람도 1백 명이 넘었다.

연속혁명론, 공동전선 등 사회주의자의 전략과 전술을 다룬 토론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진보대통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올바른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나흘 동안 열린 북카페에서는 각종 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이 1천3백 권이나 팔렸고, 다함께가 발행한 소책자도 수백 권이 판매됐다.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마친 1천2백여 명 중에 절반이 대학생이었다. 한 학생 참가자는 “이렇게 청중토론을 길게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토론회는 처음 봤어요” 하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연사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대단히 높았다.

또 전체 참가자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주최 단체인 다함께가 놀이방을 운영하는 등 여성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기도 했다.

몇 년 전 이 놀이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돼 엄마와 함께 나흘 동안 토론에 참가하기도 했다.

혁명의 시대와 우리의 과제

전교조,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현대차비정규노조, 건설노조, 한국전력KDN, 쌍용차, 이주노조 등에서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얼마 전 법정투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베트남 노동자들도 참가해서 연대의 정을 나눴다.

맑시즘 2011 행사장 곳곳에서는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각종 서명과 모금, 홍보도 활발히 진행됐다.

60여 명이 쌍용차 투쟁기금 CMS를 신청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백만 원이 넘는 지지금을 보았다. 유성 노동자들은 “내년에는 승리해서 꼭 맑시즘 강연을 들으려 오겠다” 하고 다짐했다.

삼성 반도체 피해 노동자를 위한 서명과 치료비 마련 모금, 구속노동자 후원을 위한 서명·모금,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사측에 의해 해고된 현대차 노동자에게 보내는 지지 메시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 이주노조 지지 서명 활동 등도 열렸다.

3차 희망의 버스 참가자 조직을 위한 활동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기금 덕에 우리는 재판을 치를 수 있었다. 이 모든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미신고 집회’를 했지만 ‘무죄’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판결 내용은 검찰이 향후에도 정당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방해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정말 유감이고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도 광범한 지지를 건설하며 단호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특히 레임덕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소환과 기소를 남발하며 발악을 하는 와중에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곳곳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이 체제와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질 검찰의 항소에 맞서며 ‘미신고 집회’ 부분까지도 완전히 펼쳐 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은 김형환 씨도 무죄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다.

우리의 승리에 큰 도움을 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투쟁에 계속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폐막식에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아랍혁명이 무척 예외적인 사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은근슬쩍 자기들이 그 혁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좌파 일부도 아랍 혁명을 의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제국주의의 음모가 아닌가 하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노동자들이 무엇을 이뤘는지 잘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아랍 혁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진작 이런 토론회에 왔어야 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 것처럼 혁명가로 거듭나고 싶다” 하며 맑시즘 2011이 끝날 무렵 다함께에 가입했다.

맑시즘 2011이 보여 준 변혁적 사상과 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실천 의지는 이제 투쟁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장호중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8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제전(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교),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필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8월 9일(화) 저녁 7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가칭)유성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

8월 20~21일 서울 시청광장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8월 20~21일 서울 광화문 일대
희망 시국대회

거듭 장애물을 돌파해 온 '희망의 버스'

이제 집단적 노동자 투쟁의 버스로 발전해야

박설

3차 '희망의 버스'가 또 한 번의 성공 신호를 켜. "계엄령"을 방불케 한 경찰·우파 들의 철물 수비와 폭력을 뚫고 1만여 명이 부산에 집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저주와 탄압을 퍼부었지만, 이 운동은 오히려 더한층 첨예한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할 병력 수천 명까지 빼서 '희망의 버스'를 막고 살인 해고를 관철하려 한 이명박 정부와 폭력 난동을 부린 우익들은 더욱 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경제 위기·고물가 속에 노동 대중의 고통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층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커져 왔다. '희망의 버스'는 이런 불만을 결집해 "단결해 싸우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며 지배자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희망의 버스'가 '반(反)정권 시위 버스'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를 갈았고, 한나라당 김무성은 "입기 말 레임덕을 조장 말라"고 거품을 물었다.

정부가 경찰 1백 개 중대를 부산으로 급파한 것도, '어버이연합' 같은 우익들이 각목까지 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운동·여론의 압력과 기업주·우파 들의 압력 사이에서 '고뇌'하더니 결국 '희망의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며 조남호 청문회 출석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요구 수위를 조절하며 운동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희망의 버스'에 참가한 정동영 등이 적잖은 이들의 기대를 모은 것은 사실이다. 3차 '희망의 버스' 집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연단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고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이들은 운동이 부상할 때마다 그 운동에 올라타, 금세 투쟁의 김을 빼고 뒤통수를 치곤 했다. 지금도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악질 사업주와 한편이 된 민주당 지지제장에 치를 떨며 2백 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시늉만하다가, 결국 사측을 편들었다"고 폭로한다.

민주당의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 들은 "고통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리해고와 노동자 희생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선박 여섯 척을 수주했고, 당장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조남호의 "정리해고 방침 발표 직후 주주들에게 1백 74억 원의 주식을 배당한 ...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비난할 정도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승리하려면, 투쟁을 강화해 조남호와 이명박을 더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이 '희망의 버스'에 동참해 힘과 규모를 늘려야 하고, 이 속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는 배신자 채길용을 제명하고 분명한 지도를 자임해야 한다. 얼마나 갑갑했으면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이 채길용 집행부 탄핵 연서명을 시작했을까.

언제까지 '희망의 버스'가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을 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투쟁 당사자들이 강력한 구심을 형성해야 연대의 힘도 지속될 수 있다.

구심

'희망의 버스'는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틀대는 연대 투쟁의 갈망을 보여 줬다. 지금 유성기업·쌍용차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진이 이겨야 우리도 이긴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의 85.3퍼센트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민주노총 정치 총파업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영환 위원장은 최근 "희망의 버스가 지핀 불씨를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타오르게 하자"며 8월 20일과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4차 '희망의 버스'와 결합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만 매달리며 투쟁 건설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기층의 압력이 지도부를 투쟁 선전에 이르게 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장에서 투쟁과 연대를 선포하고 건설해야 한다. 반드시 4차 '희망의 버스'와 민주노총 집회를 결합시키며 운동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것이 고군분투하는 유성기업 투쟁뿐 아니라, 파업을 준비하는 언론노조·금융노조 투쟁 등과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월 30일 부산역 "3차 희망버스" 환영 문화한마당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조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조직해야 한다.

자발성, 힘의 집중, 그리고 노동계급

민주노총·진보정당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등과 상층 선거연합에 매달리며 투쟁 건설을 방기하는 사이에, '희망의 버스'는 기층의 자발성을 고무하며 성장해 왔다. 이것은 '희망의 버스'의 커다란 장점이다.

그런데 자발성 강조는 미조직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희망의 버스'가 "과거 사회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조직 노동자들을 낱알의 개인(시민)으로 치부하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의 버스' 집회 기획에선 노동조합·단체 등 조직된 부위의 발언권이 제약되기도 했다.

이런 태도가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노조 상층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는 배신적 합

의를 했다. 그래서 공식 노동조합은 믿을 수 없고,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대안이라는 생각도 많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대부분 연대 투쟁에 열의가 높고 건강한 활동가들이다. '희망의 버스' 조직의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그런데 '희망의 버스' 기획단은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정부 공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발성을 고무하는 것이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과 대립될 이유는 없다.

예컨대 3차 '희망의 버스'는 탄압과 봉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여기저기로 대열을 분산시키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이들을 결집시켜 부산 시내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여야 했다. 그것이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자신감을 고무하는 데 더 효과적

이었을 것이다.

또, '희망의 버스'의 호소에 열정적으로 응답한 이들 중 다수가 여전히 조직된 노동자들과 단체들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탄압과 공세가 집중된 3차 '희망의 버스'에는 이들의 참가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올해 초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청년들의 반란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가와 파업으로 발전하면서 무바라크를 퇴진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희망의 버스'가 보여 준 잠재력을 더 발전시키려면, 들끓는 분노와 열기를 투쟁으로 집속시킬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일명 '왕재산' 사건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마녀사냥

지난 7월 29일 국정원은 일명 '왕재산'(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산 이름)이라는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은 7월 초 공안당국이 서울·인천 지역 노동조합 간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으로 규정했던 '일진회' 수사를 확대하며 불인 '반국가단체' 명칭이다.

국정원은 지난 한 달 동안 간첩혐의로 5명을 구속했고, 민주노동당 현직 구청장·지역위원장·지방의원과 서울·인천 지역 민주노총 간부들,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종동은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맹세" 등 선정적 문구를 동원하며 "간첩사건"을 대대적

으로 보도했다. 국정원은 수사 초기부터 연행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가족면회 금지, 변호인 접견 방해, 언론보도 통제 등 온갖 불법적 방식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온갖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반국가단체 명칭조차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급변경하는 엉성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6·15 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단"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재판부는 조직의 실체조차 없다고 판결했고, "국가기밀"로 기소된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다.

이명박과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며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

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광범한 불만이 '희망의 버스'처럼 결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북한 핵실험 정국을 이용해 노무현 정부 말기의 심각한 민심이반을 덮으려는 술책이었다.

한편, 국정원은 통합 진보 정당의 향방이 결정되는 8월 20일 전후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진보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노리는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명박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투쟁으로 연결시키려는 모든 단체·개인은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야 한다.

최영준

폴라주 ⑤⑤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과거를 묻지마세요~

노동자 자활가 참여당의 무배당 OK 회색보험

계급은 농치고 가입범위는 넓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오직 YOU, 시민을 위한 보험!

사회주의의 강령식대 환영!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1253-8282 (이리오삼 빨리빨리)



일후견

국민참여당과 진보대통합 10문 10답

Q.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합의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참여당이 합의문을 승인했으니 통합대상이다?

합의문 승인은 진보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유일무이한 기준이거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 합의문만 승인하면 그 당의 강령, 주장, 실천, 계급적 성격과 기반 등은 따져 볼 필요도 없다는 식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참여당의 '합의문 승인'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합의문이 승인됐다는 참여당 중앙위에서 참여당 지도부는 중앙위원들에게 합의문을 보여 주지도 않았다. '합의문 승인'이라는 것이 사실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결의문에 한 줄 써 넣은 것이 다였다.

유시민도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은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합의문 승인'의 실체다.

Q. 참여당의 문제점은 과거일 뿐이고 이미 과거를 반성·성찰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한미FTA, 비정규직 악법과 각종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 해의 파병 등이 참여당의 잘못된 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참여당은 이런 과거를 벗어났는가?

전혀 아니다. 올해 6월 참여당 정책위가 발표한 문서를 보면 "FTA 허브 위치를 구축하고 ...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FTA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이 "소수 조직 노동계만의 요구에 안주"하며 "노동조직의 불법 행위 옹호 등 국민 정서와 상충"된다는 비판까지 하면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들이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며 "친기업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근에 유시민은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일부러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한미FTA, 해의 파병 등을 추진하다가 망해 놓고서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게 떠넘기는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바로 참여당의 '반성과 성찰'이다.

Q. 참여당은 당 운영방식에서 진보정당과 큰 차이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는 "정당은 정책과 노선이 같은 세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운영 방식이 같은 사람끼리 정당을 같이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교과서에도 없다"고 잘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의 정책과 계급적 성격이지 운영 방식이 아니다. 합의문 승인 이후에도 참여당이 '한미FTA는 옳다. 앞으로도 파병은 할 수 있다. 미군기지는 평택에 있는 게 낫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지 운영 방식만 봐서는 안 된다.

참여당의 이런 태도는 이 당이 진보정당들처럼 노동조합 등 노동자·민중 운동에서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고위 관료나 기업주, 상층 중간계급들에 기반한 친자본가당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참여당의 운영 방식도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참여당은 대의원 체제도 없고, 이번에 연석회의 합의문을 보여 주



7월 14일 [미래의 진보] 출판기념회에 유시민과 나란히 참석한 이정희 대표. 당권파 지도부가 참여당 통합과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우경화하고 있다.

지도 않고 통과시킨 중앙위원회도 민주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Q. 참여당과 통합 반대는 참여당의 진보적인 당원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여당 평당원, 지지자들과 공동으로 함께 투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참여당 평당원 중 일부는 2008년 촛불 이후 급진화된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고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과 '희망 버스' 등에서 충분히 함께 투쟁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함께 투쟁하면서, 투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때 참여당 지지자들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함께 투쟁을 하면서도 왜 참여당의 친기업 입장이 틀린 것이고, 참여당 지도부가 투쟁보다는 협상과 중재를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지를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반면 참여당 지도부를 진보로 포장하며 통합하는 것은 참여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효과적 방법이 아니다. 이런 길을 택하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차별성은 흐려질 것이고, 통합된 정당 안에서 참여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갈등만 거듭될 것이다.

Q. 참여당과 통합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지지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정한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못 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왜 2004년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10명

으로 늘어났을 때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굴뚝에 올라가고 목을 매야 했는가' 하는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설사 참여당과 통합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치자. 과연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너무 '친노동 반기업적'이라는 참여당 출신 의원들이 친노동자 법안들을 만들려 할까?

진정으로 친노동자 정책과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있었을 때였다.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다수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투쟁이야말로 사회적 분위기를 급진화시켜 진보정당의 의식 확대에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지금 진정한 문제는 당장 벌어지는 투쟁에 뛰어들어 투쟁을 확대하지 않고 내년 선거에서나 심판하자며 대중의 수동성을 부추기는 태도다.

Q. 참여당은 반대하면서, 합의문을 승인하 지도 않은 진보신당과 통합하지는 것은 모순이다?

진보신당은 합의문을 제대로 승인하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진보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통합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에서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합의문에 동의하는 세력에게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진보진영을 향한 것이지, 비진보·친자본가 세력도 합의문만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도 올해 재보선 전에 합의문을 썼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EU FTA 처리를 방조하면서 진보진영의 뒤통수를 쳤다. 그때 민주당 박지원은 '사실 합의문

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합의문 자체가 '자유주의 세력과 구분되는 진보'를 강조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비정규직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기자본 규제, 핵 발전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해의 파병 반대, FTA 반대" 등을 담고 있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것은 진보신당이지 참여당이 아니다.

게다가 진보신당의 합의문 승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참여당과 통합 추진이었다.

Q. 지도부가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위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앞장서 나간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면서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니까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때 분명히 당 지도부는 '참여당 문제는 당 공식기구에서 논의한 바 없다', '대 참여당 당론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그 후에 일방적으로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다.

진보대통합을 '진보-개혁 통합'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와 수임기구라 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진보정치에 대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Q. 진보신당과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으로 참여당과 통합하자?

이런 단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실제로 단계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참여당과 통합하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우선 합당하면 참여당과 합당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이 단계적 통합론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참여당과 통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어차피 통합할 것이라면 함께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 계속 모호하게 남겨 두면서 계속 분란이 생기고, 진보대통합은 발목이 잡히고, 노동자들의 관심과 열정은 사라지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든 나중에든 참여당과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중요하다.

Q. 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정파 논리다?

진보신당 지도부 등의 참여당 반대는 통합 진보정당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정파 논리라는 것이다. 물론 참여당 유시민에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양보했고 지금도 연립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다. 따라서 진보신당 지도자들에게 정파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되게 참여당과 통합이나 계급연합에 반대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진보대통합보다는 참여당과 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더 우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파 논리'라고 비방하는 것은 억지다. 이것은 참여당과 통합 반대나 찬성이냐라는 현재의 구도를 정파 대결로 왜곡시켜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

Q. 참여당과 통합한다고 진보정당이 우경화한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 통합하기 전에도 이미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우경화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민주당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면서 '한명숙 만세'를 외쳤다. 한명숙은 2006년 평택 대추리 만행 당시에 총리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공공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벌인 공무원노조 탄압, 버스 요금 인상, 노동자 탄압 등에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타협하고 침묵했다.

지난해 연평도 사건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사실상 전쟁책동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은 것도 우경화 사례다. 반미 입장에서조차 후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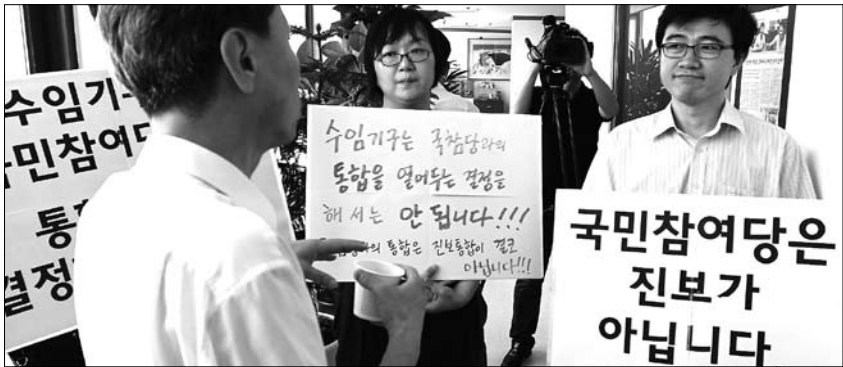
KEC,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도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보다 민주당·참여당 의원들과 함께 중재자 구실을 하며 점거투쟁을 점으라는 압력을 넣었다.

전주 버스 노동자 투쟁에서도 야권연대에 목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투쟁을 탄압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강령을 후퇴시킨 것도 대표적 우경화 사례다.

참여당과 통합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우경화해 왔는데 통합하면 그것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는 사민주의 정당이니, 자유주의 세력과 못할 것도 없다'며 우경화를 합리화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친자본가 정당과 노동자당이라는 명백한 계급기반의 차이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우리 당은 체제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동훈·전지윤



7월 19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수임기구 회의장 앞에서 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통렬히 비판한다

“참여당과 통합을 당장 집어치워라”

얼마 전 한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책이 나오는데, 출판기념회에 참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

그동안 유시민에 대해 그다지 관심 없었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인 유시민이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 등 반노동자·반서민 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자꾸만 지난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가 생각났다. 당시에는 도대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왜 강령을 후퇴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강령 후퇴와 유시민이 연결이 된다.

나는 통합 진보 정당에 참여당이 참가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 시절을 모두 잊어버린 것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사만 무려 23명이었다. 노동자 하중근이 맞아 죽었고, 농민 홍덕표가 맞아 죽었다. 고(故) 김선일까지 합하면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김주익, 광재익 열사가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바로 손배가압류가 원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가전제품까지 압류당하고 있다. 노동자 살인 정책인 손배가압류를 탄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자가 누구인가? 어디 손배가압류 뿐인가? 지금 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일 때문 아니던가?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가지고 노는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고 통파시킨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 시절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수십 명이 해고되고, 또 수십 명이 감옥에 가지 않았던가? 1만 명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2003년 11월 노동자대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사만 무려 23명이었다.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 누구였던가? 이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참여당이 ‘진보’인가?”

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 아니던가?

이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참여당이 ‘진보’인가?

요즘 유시민 대표가 이곳저곳 ‘사과’하러 다닌다고 들었다. 병 주고 약 주는 짓거리다. 정말로 유시민 대표가 ‘사과’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헛소리를 중단해야 한다.

호랑이가 분칠한다고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세욱 열사가 분신 자결하며 한미FTA 반대를 외칠 때는 외면해 놓고서는, 이제와 말 한마디 던진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참여당을 통합 진보 정당에 합류시켜서는 결단코 안 된다. 또한 새로운 통합 진보 정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표현이어야 하고,**

우리의 대안적 미래 즉, 자본주의 극복의 지를 단호하게 강령에 천명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패권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다시금 심각한 분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친자본가 정당들과 연대·연합하고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통합하려 한다면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당의 주인은 노동자·민중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자

민주노동당 주요 지도자들이 통합 진보 정당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원들이나 조직 노동자들의 생각을 ‘떠보느’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이해 국민참여당의 통합 진보 정당 포함을 반대하는 쪽과 진보신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니 진보신당도 이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대통합의 애초 취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당이 둘로 나뉘진 현실을 극복하려고 **진보대통합**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동계급 내 단결 염원을 무원칙하게도 적대 계급 간 단결로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투쟁은 무원칙하고 기회주의적인 ‘단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다.

최후통첩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노동자 운동이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에서 진보 정치 세력의 전진은 노동계급의 자신감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현재** 벌어지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내놓기보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내 세력 관계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식 확보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역학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수의 법칙을 따르면, 지난해 이래 계속돼 온 야권연대가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로 귀결됐어야 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또, 통합 진보 정당의 핵심 파트너인 진보신당이 대체로 참여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므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기도는 또 다른 진보정치 분열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 분열이 당장에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대규모 분열이 일어날 공간이 크다.

당면한 위험성은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친자본가적 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자체 우경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대폭 후퇴한 것이 한 사례다.

따라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반대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노동자 운동의 자신감 고양에 이바지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감도 증대할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노동자 정당 지도자들이 친자본가적 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 중 다수는 당 안팎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이 투쟁의 결과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우경화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얼마나 광범하게 결집하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서명은 8월 하순에 열릴 민주노동당 당대회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회의에 맞춰

두 차례 통합 반대 행동과 의견서 전달이 있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7월 18일에 민주노총 전원직 주요 간부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부들,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 학계 인사 등 19명이 연명에 제안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발표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 후퇴와 참여당과 통합 기도를 비판했다.

〈레프트21〉 독자들도 이 투쟁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투쟁은 단지 민주노동당 내 쟁점이 아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대응 중 하나인 통합 진보 정당의 진로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김인식

이렇게 합시다

- 페이스북 페이지(‘진보 정당들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반대 서명’)와 민주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진보정당들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주위 사람들에게 이 운동의 의미를 토론했고 서명을 조직해 주십시오.
- 노동조합 소속 독자들은 주변 동료들과 토론했고 서명에 동참하거나 더 좋기로는 노조나 모임의 명의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자신의 지역에서 적더라도 이 쟁점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주십시오.
- 참여당과의 통합 여부 결정은 8월 하순경(8월 21일 또는 8월 28일)에 열릴 예정인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최종 이뤄집니다. 우리의 1차 투쟁도 이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론조사로 ‘기층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우길 셈인가?

최근 참여당 통합에 대한 금속노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부는 참여당과 통합 추진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세상연구소의 여론조사도 ‘기층 대중조직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기만적으로 생색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말로 당원·조합원 사이의 민주적 토론은 거부하면서 여론조사로 그것을 때우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참여당과 통합이라는 쟁점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진보정치의 핵심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원·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동참시켜 찬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

사실, 10년 전 민주노동당 창당은 자유주의 세력도 대안이 될 수 없고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선진적 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지, 단순히 노동자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었다. 3퍼센트 안팎의 득표를 하면서도 거듭 독자적 후보를 낸 것도 척박한 땅에서 진보의 씨앗을 뿌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꿈수

게다가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한다. 당장 ‘금속노조의 여론조사에서 57퍼센트가 참여당과 통합에 찬성했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의뢰자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의뢰인이 여론의 ‘정확한’ 답변이 아닌 ‘듣기 좋은’ 답변을 얻고자 하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여론조사의 비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하는 이명박 지지를 여론조사가 신뢰를 못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 질문 자체가 특정 방향의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새세상연구소 여론조사도 그런 의도가 노골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당이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부각한 반면, 진보신당은 합의문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질문하는 식이다. 금속노조 여론조사에서도 ‘참여당과 통합 찬반’을 직접 묻지 않고, ‘참여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이라고 해서 더 많은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금속노조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노동자들의 의식은 단순하지 않다. 금속 노동자의 88.7퍼센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43퍼센트나 됐다.

또, 진보신당 당원인 금속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참여당과 통합 찬성이 절반 이하였다. ‘이명박에 맞서 정치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답도 85퍼센트나 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자들은 이런 점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자들은 여론조사는 꿈수를 통해 참여당과 통합을 패권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원·조합원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에 임해야 한다.

강동훈



노르웨이 학살과 ‘이슬람 혐오 동맹’

마틴 스미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브레이비크가 무차별 살육을 저지른 후, <가디언> 칼럼니스트 사이몬 켄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브레이비크는 청년 68명을 쏜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이다. 그는 범죄학과 뉘노 과학이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지 정치학의 분석 대상은 아니다.”

전 세계 언론도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같지 않은 분석은 위험하다. 브레이비크가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브레이비크는 극우 사상의 논리적 결론 — 살인 — 을 실천한 것이다. 브레이비크가 쓴 1천5백 쪽짜리 ‘선언문’에 담긴 잡소리들은 브레이비크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 전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 동맹’이 발전하고 있다.

이 동맹에는 파시스트와 극우 인종차별주의 포퓰리스트 정당뿐 아니라 주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된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자신이 속한 기독교민주연합 청년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겠다는 다문화적 방식은 철저히 실패했다.”

메르켈은 나아가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나라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한결更进一步 나가 이른바 “국가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국내 이슬람 테러리즘”의 탄생을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왜 유럽 지도자들은 이슬람을 꼭 집어 이 난리는 치는가? 당연히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국내적 맥락도 있다. 그들은 이슬람혐오를 이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무고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유럽 극우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국민전선(FN) 지도자 마린 르펜은 카메론의 연설을 듣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했던 얘기”라고 논평했다.

르펜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전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유럽 대표 국가의 정부들도 변하고 있다. 축하할 일이다.”

극우 정당

모든 유럽 극우 집단들은 극단적 형태의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정치를 신봉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서유럽 인종차별주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 들은 최대한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너무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는 회피한다. 오히려 그들은 민족과 정체성 같은 것에 집중해 지지자들을 늘리려 한다.

크게 봤을 때 유럽 극우의 부상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인종차별주의적인 극우 선거주의 정당들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헤이르트 빌더스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자유당(PVV)이 의석수를 기준으로 제3당으로 부상했다. 빌더스는 이슬람혐오주의를 이용해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브레이비크가 당원이었던 노르웨이 진보당 지도자인 시브 연센은 학교에서 히잡 — 무슬림 헤드스카프 — 을 금지하고 자기 딸이 히잡을 입는 것을 허용하는 부모는 추방하자고 주장했다.

둘째, 프랑스 FN, 스웨덴의 스웨덴 민주당(SD), 그리고 영국의 영국국민당(BNP) 같은 성격의 정당들이 있다.

종종 ‘유로 파시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뿌리는 전통적인 파시스트 정당이다. 그러나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강령의 내용을 순화하고 나치 이미지를 약화시켰다.

현재 FN은 2012년 대선에서 2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스웨덴 파시스트 정당인 SD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총선에서 20석을 얻어 최초로 의회에 진출했다.

SD는 난민과 이주민 수를 90퍼센트까지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BNP는 2010년 총선에서 거의 50만 표를 얻었고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리 전투 조직들이 부상하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나치 스킨헤드 등이 소

수민족과 반인종차별주의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영국에는 브레이비크가 존경하는 조직인 영국수호동맹(EDL)이 있다.

EDL은 2년 전 창단 직후부터 여러 차례 폭력적 거리 시위를 벌였다. EDL 지지자들은 모스크와 무슬림의 집 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 최근에는 반인종차별주의 모임, 노조 시위와 힌두 사원까지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들은 나치들이다. EDL은 자신이 ‘백인 노동계급’을 대변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결국 브레이비크는 이런 정치 토양에 힘입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에는 왼쪽 측면도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건축과 경제 위기에 반대하는 훌륭한 투쟁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카메론, 메르켈과 사르코지 등이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건축안에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브레이비크는 EDL 회원들에게 보내는 가슴 서늘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사악한 이슬람화 경향을 전 유럽에서 척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와 반인종차별주의 활동가 들에게는 파시스트들을 그들이 원래 속한 곳 — 시궁창 — 으로 돌려보낼 중요한 의무가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노르웨이 민중의 목소리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지킬 것이다”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죽거나 다친 이들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다.

이번 테러의 주된 표적은 노동당청년운동(AUF)이었다. AUF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청년 운동 단체로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한다.

사람들은 테러 공격에 항의해 7월 25일 저녁에 테러에 반대하는 ‘꽃 시위’를 벌였다. 최소한 15만 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는데, 오슬로 시민 수는 겨우 60만 명이다. 이날 사람들은 꽃을 들고 나왔다. 시청과 인근 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이날 시위에는 다양한 피부색, 민족,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것이 다문화주의적인 오슬로의 참모습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회주의 시인 노르달 그리에그가 지은 오래된 반전 노래인 ‘청년에게’를 불렀다. 이것은 굶주림과 불의에 맞선 국제적 단결을 호소하는 노래다.

이날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테러 공격에 반대해 신속하고 훌륭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슬픔 뒤에는 분노가 찾아왔다.

브레이비크의 테러 공격 배후에는 사회주의자와 노동 운동을 향한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노르웨이 노동당은 2005년부터 집권해 왔다. 불행히도 노동당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공격하고 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라는 압력에 굴복해 왔다.

그러나 AUF는 자신이 속한 노동당보다 좀더 급진적이다.

그들은 난민 탄압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파시즘과 조직적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 했다.

1980년대부터 노르웨이 민중은 대규모 시위와 전투적 행동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 들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왔다.

2001년에 나치들이 15세 혹은 소년을 살해하자 오슬로 시내에서 거의 6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올해 4월에 우리는 AUF와 함께 만나치 시위를 개최해 1천5백 명을 모았다. 나치가 조직한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아홉 명에 불과했다.

토마스 빌하우크
노르웨이 오슬로의 국제사회주의자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란디 페레베크와 팀 로빈슨이 극우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한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공공부문 노동자인 페레베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층의 행각이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광범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파시스트와 이슬람 혐오적 사고가 영향력을 얻게 됐습니다. 2009년 총선에서 우파인 진보당이

23퍼센트를 얻었습니다.”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공격을 행한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런 짓을 저지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사고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슬림과 이주민 들을 향한 증오, 분열,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는 서유럽 전체 주류 정치판에 퍼져 있는 독소입니다.”

노르웨이 인종 구성은 지난 20년 동안 좀더 다양하게 변해 왔다. 많은 노르웨이인이 그 점을 좋게 여긴다. 페레베크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속한 노조는 노르웨이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데, 조합원들은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이번 학살 희생자들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빈슨도 이 점을 동의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진정으로 다문화적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좋은 것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종차별주의와 이슬람혐오주의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좌파는 집회를 열고 파시스트들이 오슬로를 가로지르는 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노조 안에서 현 상황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슬로 노총은 이슬람 혐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단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에만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를 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출처: 노르웨이 언론인 에릭스

7월 25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15만 명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행진했다.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한국이 “살기에 안전한 단일문화 국가”이며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한국을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한국 국우들의 한탄은 못 들은 모양이다.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해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다.

한국을 가부장제가 강고한 사회로 묘사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억눌려 왔던 여성들이 투쟁의 주역으로 나선 과정이기도 했다. 1979년 YH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등 여성들은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다. 이것이 2000년대 기룡전자,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이어져 왔다.

브레이비크가 한국을 반동적이고 후진적 사회로 묘사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편견이다. 그런데 이런 정신나간 우익들이 이 나라에서도 존재한다.

여러 언론들이 소개한 ‘다문화정책반대’라는 온라인카페에서 이런 우익들은 다문화주의가 “수많은 외국인 범죄 다 덮어 버리고 사기 불법 편법 국제결혼”을 만들어 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싸그리 잡아다가” 쫓아내자는 따위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역겹기 짝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나 한국 사회의 유난스러운 ‘배타주의’가 아니다. 이들 집단이 확대된 진정한 배후는 지난 10년간 특하면 이주민을 ‘테러리스트’, ‘잠재적 범죄자’로 또 ‘노동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몰아 온 정부와 주류 언론들이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몇몇 언론들은 ‘탈레반 조직화 시도 적발’, ‘지하드 선동’ 운운하며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동조했다. 최근 경찰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해 집단 행동을 벌였던 베트남 노동자들을 ‘범죄 조직’으로 꾸며 수십 명을 수사하고 10명을 구속한 ‘기획 수사’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 하에서 시작된 아만적인 단속 추방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폭력적·야만적 양상으로 변했다. 2008년 마석에서 경찰과 출입국 단속반을 투입해 1백 명

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소탕 작전’이 대표적이다.

이런 탄압의 진정한 목표는 통제 가능한 노동력을 공급해 기업 이윤을 보장하고, 이주자를 속죄양 삼아 사회적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과 한국인들의 연대로 자신들의 처지를 바꿔 왔다. 2003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때는 진보 운동 진영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이주자 탄압만으로 일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한국 자본주의의 필요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의 이주노동자가 필요해진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결혼을 해 한국에 머물러 사는 새로운 이주자들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주요 이주 정책 중 하나로 표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싸그리

그런데 정부의 다문화 정책 대상은 ‘결혼의 진정성’ 테스트를 통과한 결혼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들로 한정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다문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에게 이들은 필요할 때 쓰다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한 바로 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건수는 4만 5천여 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의 틈새에서 ‘반다문화·이주노동자 추방’을 외치는 집단들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속죄양이 필요한 지배자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처럼 이주민 수를 적절하게 관

리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사실상 더 강력한 출입국 규제를 주문하는 주장은 꽤나 광범하다.

그러나 이주민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과 뒤흔어 희생되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래서 이주민을 이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진정으로 도전해야 할 표적을 가리고 함께 단결해 싸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불법 파업’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된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해 베트남 노동자들과 건설노조, 그리고 한국의 진보 운동 단체들이 단결해 투쟁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혹독한 착취와 가혹한 탄압은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건설 자본들에 맞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옹호하며 이들과 같은 편에 선 한국인들이 존재했다. 이것은 민족과 출신 국가로 분열되지 않는 노동자 연대와 국제주의를 보여 줬다.

다문화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질성이 있어 다문화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 자본주의의 질서 하에서 대다수는 놀랍게도 흡사한 착취·억압을 강요받고 또 이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우리가 공유하고 서로 나눠야 할 문화의 요소 중 빠져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저항의 경험이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분열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투쟁은 더욱 광범하게 벌어질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은 배가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 의식을 진작시키며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인종주의와 같은 후진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와 같은 경험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맞서는 우리의 확실한 대안**이다.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공격하고 이주민에 반대하는 주장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기만적이고 불철저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다문화 정책을 이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맞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노르웨이 테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정원 전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④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하려는 독자들을 돕고자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들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광기어린 살육을 벌인 브레이비크는 단지 정신나간 개인은 아니었다. 그는 파시스트 단체인 영국 수호동맹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고, 파시스트 정당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경제 위기의 고통이 크고, 각국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상황에서 파시즘이 성장하는 토양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한국에서 파시즘은 권위주의나 민족주의, 인종주의, 군사 독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정의로는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파시즘은 극우파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 정치 경향이다. 파시즘은 의회 민주주의를 없애고, 노동계급의 민주적인 조직을 철저히 분쇄해 위기를 지배 계급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트로츠키는 여기에 중요한 성격을 덧붙였다. **파시즘이 중간계급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대중운동으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극심한 경제 위기 때 중간계급도 큰 고통을 겪는다. 이들은 지배계급에게서 억압을 받지만 노동계급의 투쟁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여기기 쉽다. 지배계급이 체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노동계급도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할 때 중간계급의 불안감과 동요는 더 커진다.

파시스트는 이를 이용해 이질적인 중간계급을 인종주의 등 극우적인 생각으로 결집시킨다.

파시스트의 주요한 특징은 대중 집회를 해서 세를 과시하고 폭력집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수천 명의 검은 셔츠단을, 독일 히틀러는 40만 명에 달하는 돌격대를 운영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공격했다.

이중의 전략

물론 트로츠키는 파시스트들이 이중의 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다. 이들은 폭력 테러와 함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파시즘 조직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기는 어렵다. 중간계급은 지배계급에 비해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지배계급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배계급 역시 체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해 경찰과 군대로는 노동자 투쟁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파시스트를 이용하려는 모험을 벌일 수 있다.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은 역부족일 때가 많고, 군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이 혁명의 위협을 겪은 독일 지배계급이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 때 히틀러를 택한 이유였다.

히틀러는 1933년에 집권할 당시에는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일당 독재를 확립하고, 유대인과 사회주의자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파시즘은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돌아오면서 파시스트도 돌아왔다.

물론 최근 이들은 히틀러에 대한 존경과 인종 학살을 드러내놓고 공표하지는 못한다. 대신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파시스트 조직인 프랑스 르펜의 국민전선과 영국국민당은 여전히 인종 증오와 테러를 퍼트리는 폭력집단을 운영한다.

이런 파시즘에 맞서려면 노동계급이 최대한 단결해 공동전선을 결성하고 파시스트들과 정면대결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점잖은 체하며 선거에 나온다면 그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려 한다면 집회를 저지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파시스트들을 “인간 먼지”라고 불렀는데, 노동계급처럼 탄탄하게 조직된 세력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들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다. 반파시즘 투쟁을 광범하게 건설해 온 영국이 다른 유럽에 비해 파시스트 정당들의 규모가 훨씬 작은 데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또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토니 클리프가 말했던 것처럼 파시즘이 자라나는 토대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반파시즘 투쟁 전술은 양면적이었다. 쥐를 공격하는 동시에 쥐가 번식하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파시스트들만 공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업과 저임금 등 파시즘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사회적 박탈에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정선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활동가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맑시즘2011’의 연사로 방한해서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를 연설해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인터뷰를 해 “혁명은 21세기의 현실이다”라는 그의 주장을 크게 보도했다. <레프트1> 김용욱 기자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만나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와 국제적인 저항 운동의 상황과 과제에 대해 인터뷰했다.

당신은 맑시즘 2011 강연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유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유기적 위기’란 무엇이며 오늘날 자본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적 위기관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용한 개념인데,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내적 모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유기적 위기는 ‘정상적 경기 하강과 다릅니다. 유기적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심각해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위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두 번째 가장 심각한 위기일 뿐 아니라, 다음 달이면 벌써 위기 발생 4년째를 맞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은행 시스템, 특히 유럽 은행 시스템의 여전히 취약성입니다. 유럽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유럽 자본주의에 대한 통설 —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보다 훨씬 잘 규제되고 있다는 — 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유럽 은행 부실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유럽 국가들의 국제 물자의 배정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일 은행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많은 돈을 빌려 줬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아일랜드에 많은 돈을 빌려 줬죠. 따라서 최근 언급되는 이른바 ‘구제금융’이란 것은 사실 독일과 영국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 시스템 구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은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불안정화했지만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의 주된 이유는 중국 국영은행이 엄청난 돈을 경제에 들어부었기 때문인데, 이런 투자가 결국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경제 위기 대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여는 긴축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디폴트/제불 이행될 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이른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리스 부채 규모는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1백5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리스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연합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은 디폴트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를 원하게 된다면 자연히 유럽연합, 특히 유럽중앙은행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회원국이기에 고유한 통화와 없습

니다. 문제에 빠진 다른 나라들이 흔히 사용하는 경제 위기 탈출 방법 — 환율 평가절하 —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일자리 등을 살리려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미리 요구하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려는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해야 합니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가 다시 독자 통화를 가지면서 당연히 통화 가치가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지배계급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일부 지배자들도 ‘빚을 갚는 것’은 미친 짓이다. 디폴트 하고 유로존을 탈퇴해 통화를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 절하의 효과 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우파적 입장에서 유로존 탈퇴 전략을 주장하는 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용해 임금 삭감 효과를 내고 이윤율을 회복하는 등 유로존 탈퇴를 그리스 자본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완성된 좌파적 대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붙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가 낳을 것이 확실한 금융 격변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또, 자본 이동을 국가가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가 조건들도 그 자체로는 자동으로 친노동자적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좌파 정부가 집권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조치들을 도입할 때 좌파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와 기타 유럽 주변부 경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긴축 반대 저항에서 특히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사이에서 자율주의나 아나키즘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좌파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년들이 최근 유럽 반긴축 투쟁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만 지적은 옳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프랑스의 언급 삭감 반대 투쟁, 지난해 11월과 12월 영국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포르투갈의 실업자 운동, 스페인 광장 점거 운동, 그리고 그리스 반긴축 투쟁에서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사례에서 그리스를 제외하면 조직된 자율주의나 아나키즘 세력이 개입한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자율주의나 아나키즘은 조직적으로 강력한 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상식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성



7월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맑시즘 2011’에 참석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자율주의’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인터넷이 운동을 조직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 정치 조직을 불신하고 심지어 노조를 적대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사고를 대할 때 ‘너희는 한심한 자율주의자들이고 우리는 노동계급의 편에 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다. 너희는 자멸할 것이다’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일부가 되어 연성 자율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실천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자들이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첫째,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그 중 일부가 사회주의자가 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혼란 평가 중의 하나는 레닌주의와 ‘현대 마르크스주의’를 대립시키며 레닌주의적 당은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중앙집중주의를 낳는다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는 왜 문제일까요?

마르크스주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구체적 문제와 씨름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죠. 마르크스는 정치 조직 건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특히 제

1인내셔널 건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현대적 형태의 정당 정치가 아직 태동기일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조직 문제를 첨예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레닌, 톨스토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등은 정당 정치, 특히 대중 정당 정치가 보편화한 상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일부가 되어 연성 자율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레닌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 관한 이론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살아있는 전통이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씨름해 왔습니다. 조직 문제도 그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레닌의 ‘전위정당론’은 노동자 투쟁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자본주의적 권력은 고도로 집중돼 있고 국가는 그것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날 이집트 혁명에서도 국가 권력과 맞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이집트 국회는 해산됐지만 이집트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인 군부는 여전히 지배자들을 단결시키는 중요한 기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 권력은 대단히 집중돼 있고 비민주적입니다.

반면에 레닌주의적 조직은 다릅니다. 먼

저, 이 조직이 중앙집중적인 것은 자본가 권력이 집중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닌이 주춧돌을 놓고 이후 트로츠키와 그람시 등이 더 발전시킨 레닌주의 조직은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달리 정치 조직과 투쟁 · 운동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근본 원리로 삼습니다. 이것은 조직과 정당 정치가 보편화한 상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일부가 되어 연성 자율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혁명은 당선이 말했듯이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흔히 아랍 세계는 이슬람주의 때문에 좌파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말이죠.

중동 역사를 보면, 공산당과 세속 민족주의자들 등 좌파들이 중요한 구실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라크에서는 혁명 과정이 진행됐고, 당시 이라크 최대 정당은 이라크 공산당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혁명이 패배하면서 공산당과 나세르 등을 추종하는 세속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됐고 덕분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백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 이슬람협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 세



2011년 5월 영국 공공부문 긴축 반대 시위. 긴축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며 노동자 운동을 급진화시키고 있다.

계를 바라보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이 등장한 과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 스탈린주의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니 클리프 등 국제사회주의 전통에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집트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성장한 운동을 —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운동, 이라크 침략 반대 운동, 카파야가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06년 분출한 대단히 중요한 노동계급 투쟁 등 — 에 개입해 일정한 구실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 이들 외에 이집트 운동에는 여러 단체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슬림형제단입니다. 이 조직은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히 입장 차이가 큼니다. 그 외 각종 인권운동 단체, 나세르주의 단체 등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히 노동계급 운동을 중심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책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가 최근 한국에 번역됐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날 제국주의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책에서 제국주의를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의 상호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오랜만에 미국에게 경제적 경쟁자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자이기도 한 국가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어떤 사람들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도전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종식 후 이들은 주로 경제적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됐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진정한 지정학적 도전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은 단 한 번도 진정한 경제적 도전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미국을 약간 앞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2차대전 후 결성한 군사 동맹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다. 중국 지배자들은 당연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패권 국가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배시키고 확보한 이 지역 지배 체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명한 제국주의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은 양국 지도자들이 상대방에게 약감정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쪽이 중국보다 좀더 급격적으로 약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 등을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화평굴기’[평화롭게 부상한다]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중국 국가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래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반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



2011년 5월 이집트 카이로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다.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 진보 진영 내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파에 맞서 부르주아 정당과 지 포함해 최대한 광범히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민전선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권과 시민권을 포함한 대중을 공격하는 우익에 맞서 단결하자는 염원은 자연스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전선이라는 것은 노동계급 정당과 이른바 ‘진보적’ 부르주아를 포함하는 계급동맹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인민전선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노동계급의 이익이 부르주아 정당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는 대단히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인민전선이 초래할 부정적 사례를 찾기 위해 1930년대 유럽 사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 경협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이 정부들 아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됐고 미국의 해외 정책 전쟁을 지원하며 한국군이 파병됐습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례를 사회주의라고 말하던 1947년에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써서 소련이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이후 국제 사회주의 경향을 창설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REVOLUTIONARY REHEARSALS

혁명의 현실성

20세기 후반 프랑스, 칠레, 포르투갈, 이란, 폴란드의 교훈

클린 바커 지 역 | 김용민 옮김 | 책값 | 18,000원

2011년을 뒤돌아보면 혁명은 혁명이 역사적 속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동서양의 현실임을 증명했다. 이런 혁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정한 대안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영국 사회주의자 클린 바커 등이 쓴 <혁명의 현실성>은 20세기 후반 다섯 개 나라 혁명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혁명의 성공을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의 정치가 왜 필요한지 실력있게 보여 준다.

Alex Callinicos

Imperialism and Global Political Economy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간!

친경록 옮김 | 책값 | 20,000원

혁명의 현실성

20세기 후반 프랑스, 칠레, 포르투갈, 이란, 폴란드의 교훈

클린 바커 지 역 | 김용민 옮김 | 책값 | 18,000원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 — 계승할 것이 못 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지난 당대회에서 기존의 급진적 강령을 폐기하고,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새세상연구소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펴냈고, 박경순 부소장은 <진보정치>에 연재 기사를 썼다. 당 게시판에서도 오한강 당원 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연원을 따지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은 오히려 이를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해방 당시 조선의 ‘진보적 민주주의’론과 오늘날 당권파가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론의 세세한 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다. 사실, 오늘날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과거 공산당의 단계혁명론에 대당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기는 하다. 즉, 과거처럼 다음 단계로나마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전망이 있기는 한 것인지 말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론의 핵심적인 정신은 여전히 같은데, 그것은 바로 계급 협력과 우경 기회주의라는 점이다.

‘인민전선 노선의 기원이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레닌은 1917년 ‘4월테제’ 전까지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구분하는 단계론을 유지했음에도, 부르주아 계급을 동맹 대상으로 삼고자 한 멘세비키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후 레닌은 이런 단계론조차 파기하고, 트로츠키가 주장한 연속혁명론과 다르지 않은 실천을 통해 혁명에 성공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원은 코민테른 7차대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른바 ‘인민전선’ 전략이다. 당시 스탈린이 인민전선 전략을 제기한 것은 나치의 집권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탈린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와 동맹을 해서 나치를 견제하고자 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데, 나치 집권 전에 공산당은 사민당이 ‘사회파시스트’라며 노동자 공동전선을 거부해 히틀러 집권에 일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인민전선’은 소련의 외교적 이익에 각국 노동계급 운동을 종속, 또는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인민전선 전략 하에서 서방 진영에 속한 노동자 계급은 서방 지배자들을 위협할 언동을 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 스탈린이 바라는 서방 지배자들과의 동맹은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에도 인민전선 전략은 유지됐다. 미국과의 전후 세력권 조정 협상이 끝나지 않은 이상 서방과 유화 국면은 한동안 유지돼야 했다. 이 때문에 각국 공산당은 종전 후 붓물처럼 터져 나온 각국의 노동계급 투쟁을 억제했다. 당시 준혁명적 상황은 자본주의적 질서로 대체됐고,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 노선·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은 이를 돕는 구실을 했다.

계급투쟁을 억제한 ‘진보적 민주주의’론

‘해방’ 직후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좌파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론을 내세웠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단계 조선혁명의 국가건설 이념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노선을 추구하였다.”

문제는 이 “현실노선”이 정작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다.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계급연합을 수반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향후 건설될 국



1946년 1월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좌파는 식민지 민중의 자존심을 짓밟은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말았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사회주의 강령을 병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논쟁의 맥락에서 두 강령의 정신은 절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쪽은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계급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쪽은 사회의 지배적 편견에 굴복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편견을 극복하며 전진하자는 것이다.

가 권력을 “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했다. 실제 공산당이 선포한 인민공화국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했고, ‘반동적 민족자본가’ 김성수조차 교육부장(교육부 장관)에 추대하 바 있다.

이런 계급 타협 정책은 당시 노동자·농민의 급진적 진출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일본인 자본가 소유의 작업장은 물론 조선인 자본가 소유의 작업장까지 직접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박헌영과 김일성 모두 이런 흐름을 스탈린의 지침에 따라 ‘좌경’이라며 억제했다. 심지어 공산당이 지도하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쟁의부를 폐지하고 산업건설부를 신설해 ‘민족자본가’와 협력을 강조하고 쟁의를 억제했다. 마찬가지로 공산당은 빈농들의 토지 접수 시도도 좌절시켰다.

문제는 이런 아래로부터 투쟁을 억누른 채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는 반식민, 반봉건이라도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친일·친미 반동 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해체와 노동자·빈농의 급진적 투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나중에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물리력 덕분에 토지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

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의 자발적 투쟁이 해방 직후보다 갑자기 고양해서 그런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핵심은 소련 점령지에서 자신의 체제와 유사한 친소 정권을 복제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스탈린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서방의 지배자와 노동자들을 핵심으로 겨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소련이 점령한 점령지 자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예컨대 ‘진보적 민주주의’의 ‘폭넓은 연대연합’에 따라 북한에서 조만식을 구색맞추기 식으로 연립정권에 참가시켰지만, 이 형식적 연립마저 붕괴되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소련 점령지에서 벌어진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화를 ‘진보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발전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의의를 부여하려 시도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노동자 권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공론일 뿐이다. 그 ‘발전 단계’는 계급투쟁의 양상에 따른 게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협약해지는 정도, 그에 따라 소련 점령지가 소련식 체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알려 주는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

어쨌든 공산당이 계급투쟁을 자제시키고 ‘민족 자본가’와 협력을 강조하는 동안, 해방 직후 수세에 몰려 있던 친일·친미 반동 세력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좌익이 민족 단결을 설파하는 동안 노동자·농민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좌익에 유리했던 세력 균형추는 급격히 바뀌었다. 1948년 제주 4·3항쟁의 비극적 결말은 이때부터 씨가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론은 과연 자주적 노선인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타협과 협력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주’와 거리가 멀었다. 당시 모든 좌파들이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라며 칭송했지만, 미국은 인민위원회, 노동운동, 농민 운동, 좌익 정치 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했다.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론은 이런 탄압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의 태도는 이른바 ‘신전술’을 채

택하며 바뀌지만, 이것이 전면적인 반미·반제국주의 항쟁에 돌입했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신전술’은 스탈린·김일성·박헌영 회담의 결과였고 스탈린의 대미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미소공동위원회는 아직 최종 파탄나지 않은 상태였다. 신전술과 그에 따른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은 본질적으로 결렬된 1차 공위를 재개하라는 압력 수단이었다.

바뀌 말해 미국은 여전히 공위의 주체였고, 공위 결과에 따라 임시정부가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신전술의 ‘반미’는 반쪽짜리 ‘반미’였다. 실제로 항쟁 과정에서 공산당은 미군과 충돌을 극력 회피했다. 그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은 정치적으로 출구가 없는 투쟁이었던 셈이다. 실질적 지배자와 충돌을 회피하는 투쟁이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당시 조선의 모든 좌파들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맞서 투쟁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해방자로 환영했다. 그리고 이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상으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이 때문에 좌익은 식민지 민중의 자존심을 짓밟은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말았다.

박헌영, 김일성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신탁통치를 찬성했다. 여운형도 마찬가지로 찬성했다. 신탁 찬성, 즉 제국주의 열강 간 협상으로 통일 자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략 자체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 통치를 전제하면서, 즉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적 정책에 맞서지 않으면서 ‘자주’를 말한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당시 조선 민중의 역량상 신탁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신탁통치를 합리화한 논리가 바로 ‘자치능력 없는 국민’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힘을 기르자는 ‘현실론’은 결국 분단과 한국 전쟁의 비극을 막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베트남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한 반제 자주의 사례로 여기기 어렵다. 7차 코민테른의 인민전선 노선은 서방 제국주

의가 지배하는 식민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 인민전선 노선이 적용된 결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민족해방투쟁은 억제됐다. 베트남 공산당은 ‘프랑스 제국주의 타도’ 같은 슬로건을 내걸지 못했고, 식민 당국에 ‘유화적 태도’를 취해야 했다. (물론 스탈린·히틀러 협약 이후 사태는 또 달라진다.)

2차대전 종전 직후 일본의 패망으로 베트남에서 권력은 공산당에게 넘어갈 듯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은 소련의 지침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영국의 주둔을 환영했다. 이를 위해 호치민은 트로츠키주의자와 각종 민족주의 그룹이 이끈 반영국 봉기를 진압했다. 이는 남부 베트남에 제국주의의 교두보를 허용한 꼴이었다. 결국 베트남 민중은 30년간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뤄야만 했다.

진보당, 민중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조봉암의 진보당과 1990년대 민중당과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진보당과 민중당에게는 진정한 노동계급적 기반이 없었다. 이 정당들이 실패한 프로젝트로 끝난 데는 이런 계급적 기반의 부재가 큰 몫을 했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당과 민중당에 비해 비할 바 없는 질적 발전이다. 그런데 왜 당권파는 이런 발전을 다시, 심지어 1950년대 진보당 수준으로 되돌리려는가? 백년 양보해 진보당의 다계급적 ‘민중주의 강령’은 지극히 후진적이던 남한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운동이 궤멸해 존재감이 없던 당시 상황의 한계에서 나왔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사회주의 강령을 병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논쟁의 맥락에서 두 강령의 정신은 절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쪽은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계급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쪽은 사회의 지배적 편견에 굴복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편견을 극복하며 전진하자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앞으로 통합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

한규한

상반기 학생투쟁이 보여 준 잠재력과 약점

올해 상반기는 모처럼 대학생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3~4월에는 고려대·경희대·이화여대·인하대·서강대 등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1천~3천 명이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열렸고, 그중 몇몇 대학 투쟁의 경우 점차 농성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5월 말~6월 초에는 '반값 등록금' 쟁탈 시위가 벌어졌다. 그 무렵 서울대에서는 법인화에 반대해 학생 수백 명이 28일간 본관을 점거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학생운동은 2008년 촛불항쟁과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나타난 정치적 급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에도 등록금 인상, 대학구조조정, 대학 당국의 학생운동 탄압 등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진보적 학생들의 사기는 높지 않았다. 2000년대 중후반 노무현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그 정부와 진보가 동일시되면서 겪었던 진보의 입지 약화 때문이었다.

2008년 촛불항쟁은 이런 분위기를 바꾼 전환점이었다. 물론 촛불항쟁은 동원 규모에 비해 가시적 성과물을 얻지 못했고, 당시 대학생들은 점거 농성, 동맹휴업 등 전투적 행동을 구사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촛불항쟁은 정치적 급진화라는 커다란 퇴적물을 남겼다. 촛불항쟁 당시 청소년이었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학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장하준 등의 신자유주의 비판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다른 한편, 경제 위기는 대중의 불만도 더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적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나타난 물가 인상 압력 때문에 노동계급 가계가 앓는 자리에서 임금에 쫓기는 효과를 경험하면서, 올해 상반기 투쟁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과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주된 형태로 등장했다.

상반기 투쟁들의 성과는 불균등했다. 각 대학 등록금 투쟁에서 경희대·인하대 등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둔 반면, 고려대·이화여대 등은 그러지 못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은 다른 국공립대학들의 법인화 추진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서울대 법인화 중단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날 학생운동의 잠재력뿐 아니라 약점도 동시에 봐야 한다.

한대련 주류 계열의 인민전선 정치

올해 학생 투쟁들은 투쟁 초기부터 대체로 투쟁에 나선 학생들과 학생회 지도자들 사이에 긴장을 안고 있었다. '비운동권' 총학생회들은 학생들과 대학 당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학생들 편에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대학 당국과 부적절하게 타협하곤 했다.

'운동권' 학생회들은 그나마 낫긴 했지만, 그들조차 대체로 선진적 학생들의 움직임에 뒤쳐져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의도치 않게 투쟁의 지도자로 내몰렸다. 올해 학생총회가 성사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 지도자들은 학생총회가 성사되리라 예상하지 못하거나, 학생총회에서 점거 농성과 같은 전투적 행동이 결정되리라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 '운동권' 학생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전투적 행동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반대했는데, 특히 한대련의 주류인 경기동부연



6월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 학생운동 지도부의 개혁주의 정치가 투쟁의 성장을 방해하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합 경향이 제일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그들은 올해 초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학자금취업후상환제(ICL) 개정 등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각종 "법,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 활동가들은 '반값등록금' 촛불 시위 때도 현 정권을 '1년 후 심판하자'는 내용의 배너를 들기도 했는데, 대체로 1년 후 대선과 총선에서 반(反)한나라당 후보들이 당선하는 것을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면 학내 등록금 투쟁에서 투쟁 수위를 '지나치게' 높일 필요가 없다고 여길 법했다.

실제로 이들은 학생총회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회성 집회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 당국들이 일회성 집회만으로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학생총회에 모인 동력을 점거 농성 같은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화여대에서 한대련 활동가들이 이끄는 총학생회는 점거 농성을 반대했고, 고려대 총학생회도 비운동권 학

생회들을 추수하며 점거 농성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는 한대련 주류 NL계열의 인민전선 정치에서 비롯한 개혁주의 때문이었다.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을 추구하는 인민전선 노선은 민주당에 무비판적이게 만들고 학생들의 투쟁을 민주당의 강령과 투쟁 전술 수위를 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효과를 냈다.

'반값등록금' 촛불시위가 동력을 더 유지하지 못했던 것도 이 노선과 관계 있다. 사실 한대련은 애초부터 이 투쟁을 6월 국회 입법 로비용으로 제한적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투쟁 확대를 위해서는 의제 확장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함께 등의 주장을 한사코 무시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집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려 했다.

학생회 운동

이런 약점은 학생운동을 학생회 운동으로 환원하는 기존 학생운동의 그릇된

전통 때문에 더 문제를 낳았다.

그동안 NL 경향은 학생회가 학생운동을 대표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회 공식 기구를 물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학생총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는 학생회 대의 기구에 비해 부차화했다.

예컨대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이하 중운위)가 점거 농성을 반대했지만 고려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그 결정을 뒤집고 점거 농성을 결정한 후에도, 고려대 총학생회는 비운동권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의사를 중시해 점거 농성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운위에 넘기는 식의 타협을 반복했다.

NL 경향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을 지도하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급진좌파인 학생행진 경향이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 단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회의체인 총운위는 비운동권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학생총회에서 압도 다수의 학생들이 지지해 점거 농성에 돌입했을 때 서울대 행진 경향 활동가들은 끈질기게 투쟁하려는 학생들을 대변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열의 있는 학생들로 투쟁 지도부를 구성하고 점거 투쟁을 벌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학생행진 경향의 총학생회는 그런 방향을 채택하지 않고 학생회 활동가들 다수가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투쟁을 제한했다.

결국 점거를 해제할 때도 점거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 다수는 점거 해제를 반대했지만, 총학생회는 학생회 대의 기구인 전학대회를 열어 점거 해제를 통과시켰다.

이런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은 학생회가 자동으로 가장 전투적인 학생들의 의식과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부터 1991년 5월 투쟁까지 학생들의 폭발적 투쟁이 지속될 때만해도 학생회는 명백히 투쟁 기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회는 투쟁 기구의 성격도 일부 남아 있지만, 축제 등 학내 행사 조직 등을 신경 쓰는 복지 제공자의 성격도 동시에 강화됐다. 만약 학생회 집행부가 후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학교 당국이나 기업 등에 맞선 투쟁을 이끌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복지를 제공받는 파트너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 좌파들은 학생운동을 학생회로 환원하지 말고, 학생회 안팎 모두에서 조직해야 한다.

전망

상반기 학생 투쟁의 동력은 사그라졌지만, 학생들의 투쟁은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

첫째, **올해 학생 투쟁이 비록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커다란 패배로 끝난 것도 아니다. 비록 NL 계열의 인민전선 정치가 낳는 개혁주의·선거지상주의 분위기 때문에 대중이 다소 수동화돼 있긴 하지만, 급진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아, 불만은 더욱더 증대할 것이다.

둘째, 인민전선 노선이 대중의 의식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은 한나라당이 싫어서 민주당에 마지못해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의 투표 행위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함축한다. 그러나 NL 계열의 인민전선 정치는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뜻한다. 이런 간극은 상황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셋째, 서구의 1968년 반란, 한국의 1987년 항쟁 등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겪는 소외 때문에 학생들의 투쟁은 갑작스레 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번 학생들의 투쟁도 올해 상반기처럼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혁가들의 의식적 노력이 중요하다.

사실 학생들의 폭발적 투쟁조차 그들이 자본주의에서 겪는 소외를 부분적으로 완회시킬 수는 있어도 소외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투쟁에 나섰다가도 그들 자신의 힘에 한계를 느끼면서, 급세 투쟁에서 이탈하곤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오로지 이윤 생산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투쟁에 나설 때만 가능하다. 즉, 학생 투쟁이 노동계급 투쟁을 촉발해, 노동계급이 다른 피억압 집단과 함께 혁명적으로 분출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투쟁도 전체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NL 계열의 인민전선 노선에서 비롯한 개혁주의에 대항하는 변혁적 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할 수 있고, 학생 부문의 시야가 아니라 전체 사회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투쟁에 나서도록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중요하다.** 그런 지도력을 건설하는 데에서 변혁 정치 조직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혁 정치 조직 건설로 전투적 학생 활동가들의 과제를 환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급진화가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 대중은 급진화하면서도 개혁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수동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혁 정치 조직 건설과 진보적 학생들과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운동 건설하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장병호



28일간 지속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본관 점거

노동자들은 이집트를 바꿀 힘이 있다

7월 8일 이집트인 수백만 명이 이집트 항쟁 동안 사망한 순교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내무부 장관 사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의 규모 덕분에 애삼 샤라프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정부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시위대는 아직 결정적 요구를 따내지 못했다.

이제 이집트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힘을 사용해 7월 8일 시위의 요구를 따내야 한다.

그들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나기 며칠 전에 그런 구실을 한 바 있다. 현재 벌어지는 파업들은 노동자들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 준다.

7월 20일 밤에는 공항 노동자 수천 명이 기습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전 이집트 공군참모총장을 민간 항공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항의해 공항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

공항 노동자들은 또한 전(前) 장교들을 민간 항공부 관리로 임명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이집트항공 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알아흐람〉은 노동자들이 “현 이집트 공군사령관 레다 하페즈를 만나 오랜 협상 끝에 72시간 뒤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파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월 파업과 점거를 통해 힘을 보여 준 항공 관제사들은 독립 노조를 결성했다.

조종사, 정비 노동자, 지상 요원과 승무원 들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갑자기 ‘누가 카이로 국제공항을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움직임은 권력자들에게 골칫거리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일 때 사장을 상대로 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힘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본주의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빈민, 피억압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시위, 점거, 식량 소요, 경찰서 공격 등을 통해 자기 요구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와 달리 자본주



지난 2월 파업 중인 대중교통국 노동자들 혁명이 전진하려면 이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의 체제의 중심부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노동자들이 사장의 명령에 따라 일하기를 거부하면, 사장이 받는 타격은 이윤 감소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사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정치적·사회적 통제시스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윤과 권력

오늘날 이집트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이로 대중교통국 노동자 3천 명이 넓은 타흐리르 광장에 가면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다른 시위 집단과는 다르다.

그들은 2월부터 3번 파업을 벌여 그때마다 카이로 버스 교통 체제를 마비시켰다.

장군들은 노동자 수천 명을 잡아들였고 노조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장군들은 경제를 마비시키고 나라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빼앗지는 못했다.

그들은 올 2월 무바라크가 쫓겨났을 때 이집트 주요 작업장 중에서 어떤 형태든 노동자 투쟁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파업 전통이 있는 작업장과 노조 조직이 가장 강한 곳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혁명 과정에서 파업들은 순식간에 노동 조건, 임금과 같은 ‘경제적 쟁점’을 뛰어넘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7월 5일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주지사는, 옛 집권당 출신 인사를 복직시키려는 시도에 반대 선동을 벌인 지역의회 근무자 2 명을 다른 곳으로 전근을 보내려 했다.

그 노동자 중 한 명은 파라그 사반으로, 그는 알렉산드리아 서쪽 구역에서 선

출된 지역의회 위원장이었다.

이곳의 지역 정부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고 선출되지 않은 장군 출신 지역의 회 의장을 의회 건물 밖으로 내쫓았다.

그가 강패를 대동하고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노동자들은 그를 내쫓았다. 며칠 뒤 이집트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광장 점거가 확산되자 이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파업을 선언하고 그들 중 수백 명이 사드 자굴 광장 점거에 참가했다.

그들은 이제 주지사 사임뿐 아니라 샤라프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다른 수십만 명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들은 또한 선거를 통해 쫓아낸 옛 장관의 빈자리에 파라크 사반을 임명했다.

애당초 내부 부패를 폭로한 동료를 보호하려고 시작된 파업이 어느 순간 훨씬 중요한 것 — 이집트 국가의 일부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수단 — 으로 변했다.

공항 노동자 투쟁도 7월 8일부터 대중 운동이 부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7월 16일 타흐리르 광장 점거에 참가 중이던 공항 노동자 노조는 국무조정실로 행진해 무바라크 정권과 연관있는 전 민간항공국 국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7월 8일 좀더 전투적 투쟁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던 내각 물갈이는 타흐리르 광장과 다른 도시 점거 투쟁이 샤리프 정부와 최고군사평의회에 커다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들은 파업과 점거가 상호 충돌하는 전술이 아님을 증명한다.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개별적으로 제기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지금 이집트 노동자들이 혁명의 목표를 ‘프롤레타리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면서 세 가지 과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째, ‘프롤레타리아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목표들을 성취하려는 것은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상호 결합되는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셋째,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은 기존 국가를 대체할 민주적 대안의 기초가 되는 기구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그런 기구의 대표적 사례로 1905년 러시아 혁명 당시 나타났던 노동자대표평의회(소비에트)가 있다.

당시 트로츠키는 “소비에트의 본질은 대중적 권위를 가진 기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런 노력은 기존 정부를 뒤흔들고 해체하려고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집트에서 혁명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기존 국가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는 능력을 가진 노동자 파업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타흐리르 광장 시위대에 대한 정부와 군부의 공격이 보여 주듯이 그런 행동을 급습히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앤 알렉산더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디폴트는 면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미국 경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소위 초당적 합의로 미국은 가까스로 파산선언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본질적인 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국경제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기대한 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부진을 아랍 혁명으로 인한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여파로 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미국의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랍 혁명 이전부터 미국 경제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극도로 삼가고 있고 주택시장은 버블 붕괴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가 보여 주듯이 이제 전통적인 경기부양책 — 소비지출 증대와 부동산 가격상승 — 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현재의 미국경제가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으로 반짝 회복을 보이다가 1936~37년에 다시 침체에 빠진 것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0년대 이후의 수익성 하락과 이것을 은폐시켜 주었던 세계경제의 불균형에서 비롯한다. 미국 경제는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벌충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이루어진 글로벌 저축잉여 — 벤 버נק기가 말한 저축과잉(saving glut) — 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낳았다. 하지만 2008년에 축제는 끝났고, 이제 남겨진 쓰레기를 치워야 할 때다.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실업률이 10퍼센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고용이 늘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2퍼센트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 이면에는 복지재정을 줄이고 임금을 인하하며 노동조합 권리를 축소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양당의 특별위원회가 마련하는 추가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재정지출은 복지 재정이 될 공산이 크다.

‘초당적 합의’의 이면

오바마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핑계로 1930년대 대공황 때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만들어진 메디케어(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를 축소하고 있다. 오바마는 메디케어를 민영화하려고 10년 동안 1천4백5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영화 ‘식코’의 감독 마이클 무어는 “오바마의 정책은 단일 보편적 보험체계가 아니다. 모두를 포괄하지도 않고, 비영리의 성격도 아니다. 여전히 수십만 달러를 보험기업과 제약기업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손쉽게 하는 노동자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에 열의

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경제위기로 곤경에 처한 월스트리트를 위해 돈을 퍼부었고 부도난 은행가들에게 수조 달러의 예산을 제공했다. 오바마가 ‘변화’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자기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기업주의 이익을 옹호하며 공화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두고 좌파 저널리스트 켄 실버스타인은 ‘오바마 주식회사’라고 비꼬았다.

노동자들의 집단교섭권을 없애고 임금과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며 교사들을 공격하는 일이 이미 미시간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익들은 은퇴자들이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악선동을 하지만 복지예산이 축소되면 나이 든 자기 부모를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위스콘신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잘 보여 줬다. 지난 3월 위스콘신주 공화당 주지사 스

콧 위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누구보다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케인스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수를 침체에 빠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공격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기업주들의 운명이다.

미국 경제의 디폴트 선언이라는 한바탕 소동은 지나갔지만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배자들은 더욱 불안하다.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이나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산했다는 소식이나 중국의 거품 붕괴 같은 긴급뉴스가 뜨면 미국과 세계경제는 또 한 번의 발작 증세를 보일 것이다.

이정구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소련 붕괴 20년 —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나?

20년 전 1991년은 사회주의 대국으로 알려진 소련이 붕괴한 해다. 8월 19~21일 소련 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민중의 저항으로 실패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불법화됐고, 그해 말 소련(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다.

서방은 소련 붕괴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한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역사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본주의 이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역사의 종언"이라고 썼다.

소련 붕괴는 좌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신뢰가 실추됐다. 남한에서도 소련 체제를 대안으로 삼던 혁명적 청년·학생들이 대거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다.

그러나 20년 전 붕괴한 그 체제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만약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역행한 것이라면, 모종의 혁명 과정에서 나타날 법한 것과 비슷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로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국가를 경영하던 자들이 이제는 사유화된 옛 국영기업들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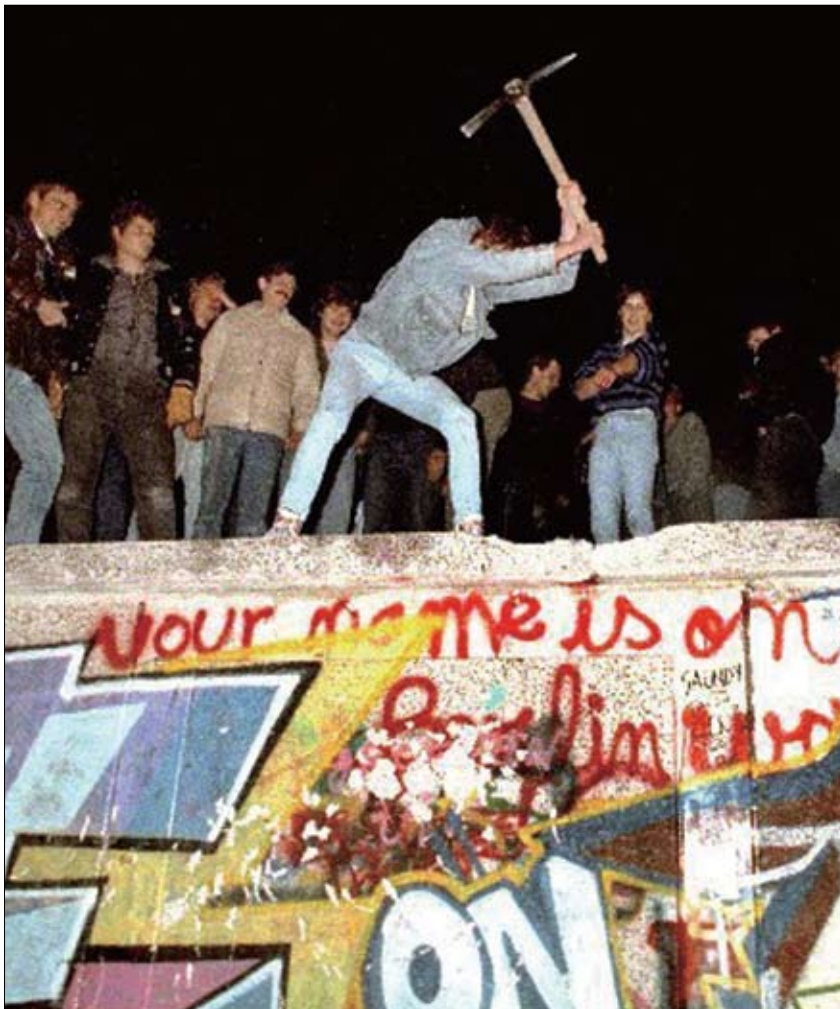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붕괴 이전 체제는 과연 사회주의였던 것일까?

국유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시장 경쟁이 사라지고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체제라고 생각한다. 서방 지배계급도, 소련 관료들 자신도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유화가 과연 사회주의의 표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라면, 국가 통제가 매우 강력했던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사회주의에 가장 근접한 정권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나치 독일은 어떠한가? 소련과 같은 시기에, 나치도 헤르만 괴링 공장 등 주요 공장들을 국가 통제 하에 뒀다. 심지어 나치의 정식 당명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었다. 당명에 "사회주의"와 "노



소련의 붕괴는 한동안 마르크스주의의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정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역사적 계기가 됐다.

동자"가 들어가 있다고 나치 독일을 사회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 전망을 내놓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썼다. 마르크스는 파리로뮈를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이 투쟁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민주적 기관들로 대체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노동계급은 자기해방 과정에 있었는가? 그 체제 하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했지만, 그 국가를 노동계급이 통제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할 권리(파업권 등)

도 보장받지 못했다. 국가는 노동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들에 의해 노동계급에 맞서서 운영됐다.

스탈린 체제는 사회주의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와 닮아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는 경쟁이 주로 사적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화하면서 기업과 국가의 연관이 깊어지고, 경쟁의 형태도 사기업들의 시장 경쟁과 국가간 군사적 경쟁이 결합되는 양상을 띠었다.

스탈린이 1930년대 단행한 급속한 공업화와 강력한 국가 통제는 바로 서방 자

본주의 열강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도는 달랐지만, 당대의 서방 자본주의 열강들(독일, 일본, 미국 등)도 국가 통제를 강화했다. 즉, 스탈린 체제는 자본주의의 경쟁 동학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고, 국유화는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간파한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이미 1947년에 이 체제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

변질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법하다. 이 체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결과물이었는가? 혁명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게 마련이지 않은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묘사한 미국인 기자 존 리드의 책 《세계를 뒤흔 열흘》을 보면, 러시아 혁명이 평범한 노동자 민중의 자기 의식적 행위였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대중 자신의 행동으로 착취와 민족, 인종, 성, 종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했다. 이런 자기 해방 과정은 스탈린 체제와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 러시아는 1923년에 독일에서 혁명이 패배하면서 고립됐고, 이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변질이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차원의 위기였으므로, 러시아 혁명은 중부 유럽으로 혁명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중부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일각잡치 노동계급 운동에 뿌리를 내린 러시아 볼셰비키 같은 혁명정당이 없었고, 따라서 그곳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한 나라에서 완수될 수 없다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공리(마르크스부터 레닌과 트로츠키까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던)에 따르면, 국제 혁명의 전망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은 분명히 노동자 국가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의 전망처럼, 다음번 국제 혁명

확산 시기를 준비하면서,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관료들에 기반한 스탈린 분파는 이 길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일국사회주의' 노선으로 소련 체제를 이끌었다.

마침내 1928~29년 스탈린의 반혁명 이 노동자 국가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전환시켰다. 스탈린은 농업집산화와 급속한 중공업 육성을 밀어붙였고,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국가의 잔재를 모조리 없앴다.

그 후 60년간 지속된 체제는 서방 자본주의 열강과 본질적으로 같은 동력에 의해 운영됐다.

초기에는 엄청난 착취와 국가 통제 덕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축적이 심화하면서 점점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만 서방 열강들은 1960년대 말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자본주의에서 다국적 자본주의로 전환한 반면, 소련은 정치와 경제의 융합 정도가 훨씬 극단적이어서 그런 전환을 쉽게 할 수 없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1991년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영국의 작가인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이 말했듯이, 그것은 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전환된 '계 절음'이었을 뿐이다.

물론 국가자본주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 노동계급이 관료 지배계급의 억압과 독재에 맞서 일어섰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역사의 복수'였지만 말이다.

1930년대 이래로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는 독일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하는 물음에 직면해 있다.

20년 전 몰락한 체제의 성격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대중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 구실을 할 것이다.

정병호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과 이명박의 구차한 변명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이고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지구온난화는 북극곰과 아프리카 빈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구온난화가 아직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 진행속도가 점프하듯이 빨라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마치 빙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열을 받으면 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내리듯이, 지구온난화 자체도 임계점을 지나면 더는 완만히 진행되지 않고 '폭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 입게 될 피해는 이번 수해로 말미암은 피해보다 훨씬 더



기상 이변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하고 평범한 이웃들이다.

를 것이다.

이를 막으려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즉, 변화하는 기후에 사회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해 재발 방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점령한 이라크에서 충격이나 폭탄과 무관하게 질병과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전쟁 이후 추가로 죽은 사람만 수만 명이었다. 지구온난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위협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세계적으로 의약품, 식량, 깨끗한 물 부족으로 수십억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보고서는 또한 같은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요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과 오세훈 등이 반대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중요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 노무현이 시작했고 이명박이 이어받은 '물 산업 육성', 즉 물 사유화는 즉각 중단되고 물의 공공성이 복원돼야 한다.

한국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개발된 나라에서는 약, 식량, 물 이외에도 또 하나의 필수품이 있는데 바로 에너지다. 특히 전기는 냉난방, 조명, 동력, 정보접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적응력이 중요해질수록 수요가 늘

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들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일본보다도 많다는 통계를 늘어놓으며 이명박 정부가 8월 1일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정전, <프레시안>)

전기 요금

이런 주장은 그러한 조치가 평범한 사람들의 지구온난화 적응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보지 않는다.

여름날 반지하에서 폭염과 눅눅한 습기와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 에어컨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외풍이 심한 낡은 집에서 겨울철 독감과 싸워야 하는 노인들에게 전기장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에어컨과 전기장판이 단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만 보는 것은 이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맨몸으로 맞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잘

못된 둘째 이유는 그것이 에너지 사용량도 제대로 줄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외국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은 가정이 아니라 기업과 공장의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더 명시적으로 "일인당 에너지 소비를 가정부분의 에너지 소비만으로 국한할 경우 ...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격을 통한 유도보다 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실 대부분의 환경오염 관련 문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 공장에서 유독성 폐수를 배출할지 여부를 가격논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법으로 금지해 오지 않았던가?

지구온난화 적응을 위해 전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병원비, 식료품, 물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싸워야 한다.

김종환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유성기업

8월 20일 노동자대회는 투쟁 전진의 불씨가 돼야

최근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민주노총 연맹 위원장들과 한 간담회에서 유성기업 투쟁에 관해 내놓은 답변이라곤, 고작 “국정감사에서 풀어보겠다”는 것이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적금을 깨고 아이들 학원비마저 끊어가며 버티는 노동자들에게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는 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런 민주당에 기대 투쟁 조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영춘 위원장은 한때 “유성기업 파업을 엄호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연대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공문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투쟁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했고 어느새 우리 투쟁은 고립됐

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한숨도 터져 나왔다.

한편, 민주노동당 총남도당은 야당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은 노사 간 합의로 분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엔 자유선진당도 참여해 “외부세력은 빠져야 한다”는 우려스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연대

이처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지도부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연대 투쟁 조직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성기업 투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은 이 틈을 비집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민주노조를 옥죄려고 친 사용자 노조를 설립했다. 1990년에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사측과 직권조

인한 인물을 앞세워 “민주노조의 투쟁은 졌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잖은 노동자들은 이런 전방위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연대의 힘이다. 7월 21일 ‘맑시즘 2011’ 개막식에서 연설한 김석현 영동지회 부지회장은 “너무나 뜨거운 박수에 힘이 났다. 우리 투쟁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응원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민주노총은 8월 20일에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등의 투쟁을 한 데 모아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 집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유성기업 투쟁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김기선

전교조·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의 2차 표적 수사가 유례없는 대량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교사 1천4백 명, 공무원 4백 명 등 1천8백여 명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운명에 처했다. 나도 기소된 당사자다.

2차 수사가 1차 때와 달라진 면은 두 가지다.

첫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갈등을 빚는 미묘한 시점에서, 경찰 수사는 생략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법원이 진행하던 수사·공판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부분 경미한 형이 선고된 1차 표적 수사·재판에 대한 검찰의 대응인 듯하다.

이는 전적으로 MB 정부의 대검찰청이 직접 기획하고 지휘한 결과물이다.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진보진영과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다. 일전에 검찰은 한나라당에 많게는 5백만 원까지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학교장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대로 교사·공무원들에게는 형평성 있게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은 “임기말 권력 누수를 막으려고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권력 누수

사실 민주노동당의 탄생 자체가 민주노조 운동에 기반했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도 참교육 실현, 민주 행정, 사회변화를 위해 노동자 정당을 지지하며 소액을 후원금을 납부했다.

검찰의 정치 탄압은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후진성에서 기인한다.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다행히 지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쟁이 시작됐고,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듯이, 정치 기본권 쟁취 투쟁을 더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박종남 공무원노조 대의원, 법원본부

기아차

조합원들이 잘못된 합의를 거부하다

기아차 좌파 집행부가 내놓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성락 집행부는 기본급 9만 원 인상, 성과급 지급, 내년 초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 실시 후 개선방안 협의 등을 “최대 성과”로 포장했지만, 조합원 53퍼센트가 이에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물가 폭등 속에서 더 높은 임금 인상과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원했다.

기아차가 올해 수조 원이 넘는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살인적인 심야노동 철폐와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는 것도 당연하다. 잠정합의안의 내용대로 ‘일단 실행하고 보자’는 것은 노동강도 강화, 휴식 시간·휴일 축소, 전환배치 강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6백여 명이 정규직화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이런 중요한 요구조차 빠뜨린 것도 유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처음부터 진지하게 투쟁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들은 교섭에만 의존해 보름 만에 잠정 합의를 했다. 대표적인 ‘좌파’ 지도부로서 ‘2년간 무쟁의’라는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전직 노조 임원의 비리를 두둔한 우파 현장 조직을 투쟁 회피의 알리바이로 삼은 듯하다. 일부 좌파 활동가들도 ‘우파의 노조 집행부 흡집내기가 쟁의를 어렵게 했다’고 핑계를 댔다.

물론,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비리 척결과 투쟁 건설은 대립되지 않는다.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으로 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연대 투쟁에도 소

극적이었다. 유성기업·한진중공업 등의 투쟁에서 금속노조 지도부의 소극성 뒤에 숨어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지 않았다. 특히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기아차 합의 소식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따라서 기아차 ‘현장투쟁 실천을 위한 공동투쟁(준)’, 사노위 기아화성분회 등이 잠정합의안 부결을 선동한 것은 완전히 옳고 훌륭한 자세였다.

문제는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금속노협’(금속노동자의 힘)이다. 금속노협은 불명예스럽게도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에서 멀어져 노조 집행부를 두둔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금속노협에 있는 일부 다함께 회원들도 부끄럽게도 이런 잘못된 입장을 취했다. 참으로 유감

스럽다.

금속노협 내부에서도 ‘선거 조직으로 전락해 투쟁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왔다.

좌파 현장 조직들이 노조 집행부가 되면 투쟁을 회피하고, 또 이런 집행부를 무비판적으로 감싸 온 것은 노동조합운동 내 좌파를 약화시켜 온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김성락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투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만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집행부의 잘못을 두둔했던 활동가들은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반성적 평가를 내놓고, 우물쭈물하는 지도부를 비판·강제하며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모승훈

전북 고속 노동자들의 호소

“악질 자본가 편인 민주당에 비판의 칼을 들어 주십시오”

2백30일 넘게 파업 중인 전북 고속노조의 민주노동당 당원 38명이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공개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대체 우리 투쟁이 왜 이토록 길어졌단 말입니까. 악질 사주들과 관·경·언 그리고 민주당이 한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

다. “이미 법에서[도] 인정한 민주노조를 사측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이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북도청에서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민주당원인 전북도지사는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에 2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민주당이 다수인 전북도의회는 버스 노동자들과 연대해 온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이 도 의회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박탈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침묵

“그런데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의 민주당과 도지사는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투쟁[에서] 저희가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했을 때, 놀랍게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서조차 이를 단한 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북버스 사주들은 이명박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던 반면, 저희 [투쟁은] 고립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삼가고, 파업 연대 건설에 소홀했다. 이정희 대표가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대연합을 밀어붙이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

온 것이다.

“전북 고속 조합원들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운명을 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악질 자본가편인 민주당에 비판의 칼을 들어 주십시오.

“부디 노동자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우리의 든든한 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정선영

‘카페 마리’ 강제 철거 시도

명동 재개발 구역 전체의 단결이 중요하다

8월 3일 새벽 용역강패 1백여 명이 명동의 ‘카페 마리’에 들이닥쳤다. 이곳은 지난 6월 14일부터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처지가 된 명동 3구역 세입자들이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곳이다.

새벽에 강패들이 다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용역강패들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잠자던 세입자들과 연대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재개발 시행사는 세입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지금은 8월 16일까지 조정기간을 두라는 법원 명령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사는 협상 자리에서도 영업 보상금 1개월 치를 더 주는 것 말고는 내놓은 대책이 없다. 이들은 예산만 1조 2천억~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재개발 규모 때문에 눈이 돌아간 듯하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이번에도 불법적인 폭력을 비호했다. 같은 날 포이동 철거 현장에도 용역강패가 들이닥쳤다.

중구청도 아는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중구청은 8월 2일 서울시청 부근의 희망단식 농성장, 재능교육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명동3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계속 농성을 이어가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늘어나고 있다. 재개발 시기가 다른 명동 2·4구역 대책위원회도 적극 연대를 결정할 듯하다. 노조 탄압에 맞서고 있는 롯데손해보험빌딩 청소 노동자들도 지지 방문을 왔다.

명동 재개발 구역의 모든 세입자들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연대를 체계적으로으로 조직할 지원대책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이재환

시리아 혁명이 반격을 시작하다

사이먼 아사프

최근 유튜브에 게시된 화면이 흐릿한 동영상 하나를 보면, 한 무리의 시리아 육군 장교들이 '민중 혁명' 진영으로 넘어 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교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더는 시리아를 휩쓰는 민중 반란을 진압하란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잔인하고 범죄적인 현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샤르 아사드의 바트당 정권이 이것을 봤다면 가슴이 서늘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리아 혁명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서방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장교들의 이탈은 이 혁명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방에 투항한 이집트나 튀니지와 달리, 시리아 정권은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또, '세속 정권'으로서 이웃 레바논과 이라크의 종교 종파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이 민중 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면서 이런 주장은 갈수록 타당성을 잃고 있다. 최근 시리아 정권이 하마 시를 상대로 전면 공격 — '라마단 대학살' — 을 감행하면서 유혈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7월 31일 하마 시에서 주민들이 보안군의 만행을 막는 과정에서 1백 명 이상이 살해됐다. 하마 시 — 1982년 거대한 반란의 중심지였다 — 는 지금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곳은 시리아 혁명이 종교 종파 간 충돌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마 시 학살 소식이 전해지자 시리아 전역에서 대규모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정권은 더는 군대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 종파 단체들에 속한 강패와 엘리트 부대들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종교 종파 간 갈



7월 22일 시리아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국가 탄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등 카드를 꺼내 시리아가 내전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다.

정부 지지자들은 알카에다와 무슬림 형제단이 이번 반란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반란이 시리아 최대 종교 집단인 수니파 무슬림 거주 지역들에 한정돼 있고, 수니파가 다른 집단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쟁 발발 초기에 시리아의 거의 모든 종교 집단이 운동에 참가했다. 희생자 장례식 때는 모스크 외침 소리뿐 아니라 교회 종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는 5개월 전 데라에서 시작했다. 시위의 발단은 경찰이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낙서를 한 어린 학생을 체포한 것이었다.

이런 시위들은 곧장 농촌 소도시와 마을로 확산됐다.

탄압, 납치와 체포 물결이 벌어지자 대

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하마 시를 포함해 대도시들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보안군을 이용해 운동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 양보를 제시했다. 그가 개혁을 약속하자 반란의 확산 속도가 잠시 늦춰졌다. 덕분에 수도 다마스쿠스와 주요 산업 도시인 알레포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내전 위험과 시위대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에 반란 물결은 아직 공장과 핵심 공업 지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사드는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이 신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거대한 국영부문을 해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리아 노동계급은 튀니지와 이집트 노동계급과 달리 아직 정부를 버리지 않았다.

물론, 도시 전역의 상인들이 철시하고

노동계급 주거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항쟁을 지지하는 파업이 벌어졌다는 보도도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최근의 대량 체포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파업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항쟁에 영향을 받은 최초의 파업이 벌어졌다. 알레포의 알라지 병원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체포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면 작업장을 박차고 나왔다.

알라지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자 정부는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만약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파업은 인근 진료소로 확산됐고, 변

호사와 기술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시리아 동부의 하사카 교사들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들은 시리아 운동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운동에 참가하면서 반란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시리아 혁명은 중동 반란 물결의 일부다. 그러나 이 혁명에 걸린 판돈은 매우 크다. 시리아 혁명의 심화 여부는 운동의 발전과 서방 열강들의 모든 개입 시도를 거부하는 것에 달려 있다.

시리아 혁명이 또 다른 리비아가 될 위험은 존재한다. 아사드는 탄압을 더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지금 시리아 혁명은 제국주의에 승리를 안기기는커녕, 이집트, 튀니지, 예멘, 바레인과 다른 아랍 지역의 반란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집트

혁명 순교자 가족과 연대하는 사회주의자들

8월 1일 이집트 군대와 경찰은 몽둥이 전기충격봉과 장갑차를 동원해 혁명 순교자 가족들과 지지자들의 캠프를 파괴했다.

12살 어린이와 몇몇 기자들을 포함해 활동가 80명이 연행됐다. 혁명 과정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의 손에 죽은 사람들 — 투쟁의 순교자로 존경받는 — 의 가족들은 7월 8일부터 타흐리르 광장에

캠프를 차렸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아이들을 기소한 관리들의 처벌을 바란다.

이들 투쟁에 참가해 온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타흐리르 광장에서 쓴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불량배’라고 부른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격수의 총알 세례에 굴하지 않고 정권에 맞서 싸웠던 바로 그 혁명가

들이다.

“그들은 혁명에서 18일 동안 타흐리르 광장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정권은 옛 얼굴을 제거하고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야 했다.

“[그러나] 무바라크나 새 지도자인 탄타위나 같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다른 정치 집단은 광장을 떠났지만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 순교

자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했다.

지도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히삼 푸아드는 “상당수 순교자 가족들의 요청에 응답해” 사회주의자들이 광장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타흐리르 광장 점거가 이집트 혁명의 전부는 아니다. 혁명은 모든 거리와 작업장으로 계속 확산돼야 한다.”

이집트 혁명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7월 말 수에즈 운하 근처의 이스마일리아 시의 자유경제구역은 20여 개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마비됐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 관련기사 12면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10호(2011년 여름)

가격 : 16,000원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

특집 | 진보진영 집권 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대선 안 되는 이유 _ 김인식
진보-개혁 연립정부는 지속 가능한가? _ 크리스 하먼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_ 크리스 하먼, 팀 포터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아니키즘 _ 폴 블랙레지

현대 진보사상 조류

토니 네그리, 맥락 속에서 보기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쟁점 | 운동 내 이슈들

일본 핵발전소 사고와 반핵 운동의 과제 _ 장호종
소셜 미디어와 사회운동 _ 조너 존스
오늘날의 학생운동 _ 정병호
장하준과 그의 제도주의 비판 _ 이정구
사노위의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_ 전지훈

마르크스주의 고전 읽기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마르크스와 임금 인상 투쟁 _ 김재현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